

#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

2015. 9. 16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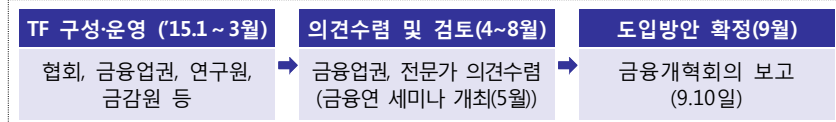
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

## 목 차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방안 .....	2
1. 적용 대상 .....	2
2. 적용 상품 .....	2
3. 행사 절차 .....	3
4. 행사 효과 .....	3
5. 신용정보관리 및 악용 방지 .....	5
6. 도입대상 금융회사 .....	5
III.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기대효과 .....	6
IV. 향후 계획 .....	6
[참고1] 청약철회권 관련 금소법안(강석훈 의원안) .....	7
[참고2]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국제 논의 및 입법례 ...	8
[참고3] 일부 상품에 대한 철회권 적용제외 주장과 포함 이유 ·	9
[참고4]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청약철회권 도입 여부 검토	10

## I. 추진 배경

-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고, 구매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지원 필요성이 증가
  -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소비자 니즈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출받은 금융소비자가 겪는 어려움이 크게 부각
  - 금융부문 자율성이 커지고 경쟁이 강화될 경우 금융회사의 적극적 권유가 소비자의 충동적 구매로 이어질 개연성 확대
- 이에, 소비자에게 숙려기간(cooling-off period) 동안 최적상품 탐색기회를 부여하자는 국제적 논의와 각국 입법사례가 활발
  - World Bank(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, '12년), G20/OECD(금융소비자 보호 TaskForce, '13년) 등에서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부여 권고
  - EU 청약철회권 지침서('08 소비자신용, '14 모기지)시행에 따라 유럽 각국이 도입 운영중이며, 미국, 캐나다 등도 기시행
- 우리나라도 금소법안(강석훈의원안, '13.10)을 통해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추진
  - 청약철회권 부여대상을 현행 보험·투자자문에서 대출 상품으로 확대, 단기간(7일)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대출철회 허용
  - 다만, 금소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업계 협의를 거쳐 청약철회권 우선 도입 추진



## II.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

- ◆ 금소법안\*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 → 제도 도입 수용성 제고 및 법제정후 전면시행시 안착 유도
  - \* 계약서류 발급일로부터 7일내 서면등 발송, 원리금과 부대비용 정산 의무 등
- ◆ 범위·행사절차 등 시행령 위임내용 명확화 →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분쟁소지 해소 및 전면시행시 예측가능성 제고

### ① (적용 대상) 개 인

- 금소법\* 제정이전 업계 자율 도입인 점을 감안하여 일단 순수 개인대출에 한정(법인대출, 개인사업자 대출 제외)하여 도입
  - \* 전문금융소비자(상장법인 등으로 구체범위는 시행령 위임)에 비해 보호필요성이 큰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부여(강석훈 의원안 등)
- (법인대출) 통상 사업계획에 따라 대출신청이 이루어지고 대출 심사기간이 길어 철회권 행사 필요성이 적은 점을 감안
- (개인사업자대출) 어음할인 등 대출의 다양성, 법인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검토

### ② (적용 상품) 리스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하 대출상품 (신용 : 4천만↓, 담보 : 2억↓)

- ① (적용범위) 소비자에게 단기간 숙려기간 부여라는 제도취지상 모든 대출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철회권을 부여하되 리스는 제외
  - 리스는 금융회사가 목적물을 취득하여 대여하므로 철회시 목적물 처분과정에서 금융회사 손해 발생 → 제외
  - \* 일반상품도 사용·시간경과 등으로 가치하락한 경우 철회권 배제(방판법, 할부거래법)

② (대출규모 한도설정) 대출 부대비용, 평균대출 규모 등을 고려

① (신용대출: 4천만원) 가구 평균 금융부채 규모(4,095만원, '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), 인지세 면제 한도(4천만원) 등 감안

② (담보대출: 2억원) 서민주택 대출한도(디딤돌대출, 2억원) 등 고려

③ (행사 절차) 계약서 또는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7일내 서면 등으로 행사

① (행사개시 시점) ① 계약서류 발급받는 행위 ② 대출금 수령 행위 중 나중에 발생한 행위를 기준으로 개시일 기산

	대출금 수령 < 계약서 수령	계약서 수령 < 대출금 수령
행사개시일	계약서 수령일	대출금 수령일
기준산정 이유	· 소비자가 숙려할 준거서류인 대출계약서를 수령할 필요 · 비대면대출도 전자서명으로 계약서 발급 가능	금융회사가 대출실행을 행사가능 기간(7일) 이후로 연기할 유인 방지

② (행사가능기간) 7일(calendar day) 이내

\* (금소법안) 7일, (보험) 15일, (투자자문) 7일, (할부거래) 7일, (방판) 14일

③ (행사방법) 서면, 전화, 컴퓨터통신 수단으로 행사

\* (금소법안) 서면·시행령상 방법 (보험) 서면·전화·컴퓨터통신 (투자자문·할부·방판) 서면

④ (행사 효과) 원리금 상환 + 부대비용 정산

① (효과 발생시점) 발송주의

- 당해 금융회사 본·지점에 서면 등을 발송한 때 철회 효과 발생

\* 약관 등에 송부할 주소 등을 명시·설명하고 철회권 행사 서면 등을 교부

② (행사 효과) 원상회복의무 (원리금 상환+부대비용 반환)

	상환(반환)			정해진 기간내 미상환시
	주체	내용	시기	
① 원금 + 이자	소비자	원금 + 약정대출이자 (대출기간동안)	철회권 행사일부터 일정기간 내 * 일정기간 (예: 3영업일)은 약관에서 정함	(금융회사) · 미상환자를 채무불이 행자로 신용정보 등록 · 부당이득반환청구* · 지연약정이자(미상환기간 동안 대출이자) 포함
② 부대 비용	소비자	근저당설정비 등	금융회사가 원리금 받은날부터 일정기간 내	(소비자·금융회사) · 부당이득반환청구* · 지연약정이자(미상환기간 동안 대출이자) 포함
	금융회사	한도약정수수료 등		(금융회사) · 미상환자를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등록

\* (예) 반환대상 부대비용 및 반환주체(담보대출 기준) (단위: 만원)

부대비용 (예시: 1억 담보대출)	계약당시 부담주체		철회권행사시 반환주체
	금융회사	소비자	
① 인지세 (7)	1/2	1/2	소비자*
②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(2.4)		○	-
③ 등록면허세 (24)	○		소비자
④ 지방교육세 (4.8)	○		소비자
⑤ 등기신청수수료 (1.5)	○		소비자
⑥ 감정평가수수료 (47.5)	○		소비자
⑦ 법무사 수수료 (17.1)	○		소비자
· 한도약정수수료 등		○	금융회사

\* 인지세 중 금융회사 부담분은 소비자가 부담

#### ⑤ (신용정보관리 및 악용 방지) 대출철회시 대출정보 삭제

- ❶ (신용정보관리) 대출철회시 금융회사·신용정보집중기관·CB 등의 대출정보 삭제 (해당 금융회사가 삭제 요청)
- 원리금 미상환자, 수수료 미반환자는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등록
- ❷ (악용 방지) 부채증명서 발급시 청약철회 행사기간 지나지 않음을 주석 기재 등을 통해 악용 소지 방지

#### ⑥ (도입대상 금융회사) 금융당국 감독·검사 금융회사와 정책기관

- ❶ (금융당국 감독·검사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: 도입) 은행, 금투, 보험, 여전, 저축은행, 신탁, 주택금융공사
- 금융당국 감독대상인 대형대부업체\* 대출에도 철회권 부여 추진
- \* 대부업법 경과규정에 따라 금융당국 검사·감독대상이 되는 '16년 하반기중 추진
- ❷ (우체국·새마을금고, 농·수협 단위조합 등 : 제외)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도입을 유도

### III.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기대효과

#### □ (금융소비자) 불필요 대출 억제 및 비용 절감 기대

-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대출 등을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철회 가능 → 불필요 대출 억제 예상
-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상품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융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

#### □ (금융회사) 철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과도한 금리, 수수료 책정 유인 감소

### IV. 향후 계획

#### □ 9~10월중 각 업권별 약관 개정안 마련(금감원·업권별 TF 운영)

- 약관개정·IT시스템 정비기간 등을 감안, '16년부터 시행

## 참고 1 청약철회권 관련 금소법안(강석훈 의원안)

제50조(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)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제23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(이하 이 절에서 “서면등”이라 한다)에 따라 청약철회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청약의 철회를 하는 취지의 서면등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송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③ 일반금융소비자는 제1항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금전·재화·용역(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반환하고, 이미 공급받은 금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금전·재화·용역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출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또는 청구할 수 있으며, 수수료 등 금전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.

⑥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제4항 및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자문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금융투자업자”는 “금융상품판매업자등”으로, “투자자”는 “일반금융소비자”로 본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.

## 참고 2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국제 논의 및 입법례

### 1 국제적 논의 동향

① (World Bank :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) : 소비자가 서면으로 포기의사 통보없는 한, 은행 등은 합리적 기간(최소 3-5영업일)의 Cooling-off 기간 부여 필요

② (OECD G20 High-level Principle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이행방안) 소비자가 어떤 불편도 겪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충분한 Cooling-off 기간 부여 필요

### 2 각국 입법례

	유로		캐나다		미국	
대상상품	소비자 신용	모기지	페이데이론 (단기고금리 신용대출)	모기지	비구매용 모기지	페이데이론
숙려기간 제공방법	청약 철회권	① 계약전 숙려기간 ② 청약 철회권	청약 철회권	계약전 숙려기간	청약철회권	반복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일정기간 대출금지
행사기간	14일 이내 (30일 이내 원리금 반환)	적어도 7일	평균 2영업일	2영업일	3영업일	1~10일 [주(州)별로 차이]

○ (독일) 철회권 행사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고 명확하게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

○ (프랑스) 소비자가 계약을 수락(accept)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

### 참고 3

### 일부 상품에 대한 철회권 적용제외 주장과 포함 이유

#### ① 담보대출

- (제외 주장) 담보설정비용 등 대출시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철회권 인정시 금융회사의 손해 발생
- (포함 이유) 소비자가 철회권 행사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담보대출 부대비용을 반환하므로 금융회사의 손해가 크지 않음

#### ② 증권사 주식담보 조건부 대출·저축은행 등 스타론

- (제외 주장) 주식가치 하락으로 담보주식이 임의처분되거나 신용거래용자에 의한 주식매수가 이미 이루어졌는데, 청약철회로 이를 원상회복해야 할 경우 금융거래 불안정 초래
- (포함 이유) 대출철회시 신용거래용자에 의한 주식의 매수행위 및 채무변제를 위한 임의처분된 행위는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
  - \* 담보물 임의처분 등으로 담보물의 소유권 등이 제3자로 변경된 경우 처분 담보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(민법 §548①)에 따라, 대출 철회권이 행사되더라도 담보를 처분 등은 유효

#### ③ 할부금융·오토론

- (제외 주장) 대출계약 철회로 자동차 등 매매 목적물이 반환될 경우 금융회사가 목적물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 부담
- (포함 이유) 소비자가 목적물을 소유하기 때문에 대출계약 철회시 소비자는 목적물 반환없이 구입대금과 이자를 상환

#### ④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상품(카드론 등)

- (제외 주장) 소비자가 불이익 없이 원리금상환이 가능하므로 청약철회권 도입시 소비자 보호 강화 실익이 없음
- (포함 이유) 대출기록 삭제로 신용등급 회복 등이 가능하므로 소비자에게 대출철회 기회 부여 필요

### 참고 4

###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청약철회권 도입 여부 검토

#### □ 보험약관대출의 “대출성 상품” 포함 여부

- (제외 논거)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에 부수한 서비스로 별개의 대출상품이라고 볼수 없음
  -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내에서 지급되며 자유로운 상환 및 수시입출금이 가능하여 만기, 연체 개념이 없음
  - \* 약관대출에 있어 ‘이자’는 소비대차에서 말하는 의미의 ‘이자’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에 대한 보상 내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(대법원)
- (포함 논거) 이자(적립금 부리이율+가산금리)가 부과되므로 금융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은 다른 대출과 동일

#### □ 보험약관대출에 청약철회권 도입 실익 : 없는 것으로 판단됨

-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은 없음
- 보험약관대출 정보는 신용정보로 집중·활용되고 있지 않아 청약철회권 행사를 통해 대출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없음

⇒ (검토의견) 보험약관대출을 대출성상품으로 볼지 여부는 제도 목적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

- 대출철회권을 도입하더라도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약철회권 도입 대상에서는 제외

\* 보험약관대출 정보가 신용정보에 포함되는 등 제도 변경으로 도입 실익이 생길 경우 청약철회권 도입 재검토